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5. 9. 19.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5. 10. 13.

2. 제안이유

-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
 - (기존) 관람료 50% 감면 → (변경) 관람료 면제
- 감면 근거 확대

-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이효석문화예술촌의 관람료 체계를 개선하여 평창군민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 50% 감경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
- 별표 4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를 면제로 변경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전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문화예술 진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군민의 관람료 면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효석문화예술촌의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군민 관람료 수입은 전체 수입 1억4천여만 원 중 약1.3%인 180여만 원(일반권 1,265천원, 통합권 550천원)에 불과하여, 면제 전환에 따른 세입 감소는 재정적 부담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전액 면제 시행 시 군민 만족도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문

화 복지 혜택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가 상승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시설 내 카페 소비 확대 유도, 나아가 외부 관광객에게 군이 주민 친화적 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 부각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됨.

※ 참고자료(2024년 관람권 판매 결산)

연도		수량	판매액(원)	비고
총계		78,068	142,091,500	
소계		31,597	67,172,500	
일반		27,284	60,788,000	
단체		3,301	5,119,500	
군민		1,012	1,265,000	
소계		16,751	71,575,000	
통합권	일반	14,398	64,791,000	
	단체	2,078	6,234,000	
	군민	275	550,000	
소계		27,802	0	
무료	기타	9,834	0	
	노인	17,040	0	
	장애인	928	0	
소계		1,918	3,344,000	
주민증	일반	614	736,000	
	통합	1,304	2,608,000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 차. (생략)

6.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